

“핵폐기장 일방적 건립 안돼”...영광 주민들 집단 소송

한빛원전 인근 주민 107명, 고준위 폐기물 계획 무효 행정소송 제기 “환경평가·의견수렴 등 절차 안거쳐”...타지역 주민·탈핵단체도 참여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이하 고준위 기본계획)에 반발, 전국 원전 주민 및 지자체들과 연계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 107명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고준위기본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영광주민들 외에도 다른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과 탈핵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고준위기본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 적합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는 산업부가 중간저장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 부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가 하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임시저장시설이라도 향후 수십년 간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지(인구, 지진 등의 안전성) 및 시설 설계기준(미사일공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 등 중간저장시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돼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준위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원칙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계획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담으면서 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최소 10만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정한 기간 내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 생각으로, 사실상 영광에 원전 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 등 사실상 정부가 강요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시설로 ▲임시보관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으로 나누고 중간저장·영구 처분시설 부지

의 경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주민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과연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자신들 동네 옆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게 주민들 입장이다.

세계 주요국도 영구처분장 마련과 안전성 확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중간·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해놓고 있는 점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원전 인근 주민 및 환경단체들 목소리다.

평생을 영광에서 산 노병남(59)씨는 “주민들은 한빛원전 외에 추가 핵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면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으면서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17년째 영광에 살고 있는 박빛나(39)씨는 “20~37년 간 핵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을 한다는 것

데, 한빛원전이 지어진 이후 수십년이 흘렀지만 여태껏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임시저장소가 영구 처분장으로 굳어진다고 의심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중간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진척되지 못했다.

영광군은 주민들과의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신,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를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송을 맡은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원전이 소재한 자치단체들은 방사선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과 생명권·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확산에 광주 아동 돌봄기관 어찌나 돌봄 사람 없어 확진 교사들 어쩔 수 없이 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광주지역 아동 돌봄기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돌봄기관측이 부족한 의료·돌봄 수요를 채우기 위해 감염병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돌봄 교사들을 무리하게 출근시키는 등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적절한 대체 인력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30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후 광주시 동구의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내 영아(0~4세) 22명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 16명이 무더기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중인 교사 2명이 감염병법을 위반하고 출근,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소측은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대상인 돌봄교사들 중 몸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교사들에게 ‘돌봄 사람이 없다’며 출근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들의 경우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대체 근무 인력을 당장 구할 수 없다보니 불가피했다는 게 보호소측 해명이지만 돌봄 인력 확충 등을 고민하지 않은 채 교사들을 위험에 내몰

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다.

보호소측이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일부 공간에서 함께 돌보던 점도 감염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초 보호소는 본관(방 5개)과 신관(방 4개)에서 40명의 영아를 돌보다가 지난 23일부터 본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자 본관에 있던 신생아 8명, 100일 이하 영아 12명 등 20명을 신관으로 옮겨 생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영아들을 위한 분리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에서 3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앞두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보호소 관계자는 “해당 평가는 6월에 있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행된 공사”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만 5~11세 소아·아동 백신 접종
만 5~11세 소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광주 북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소아용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두환 5·18 민사재판, 상속인 이순자씨 상대 진행

5월 25일 광주고법 선고 공판

전두환씨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재판이 부인 이순자씨가 상속인으로 정해져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

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씨의 법적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할 당사자가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최종변론이 예정된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

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절차는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따른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고록에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교육청, 수업 중 ‘尹 비판’ 교사, 징계 대신 주의·경고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광주 모 고교 교사에게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수업 중 윤 당선인을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광주 모 고등학교 A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11일 수업 중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니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교사의 사정으로 대체 수업을 들어간 A교사는 자율학습 감독 중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는 큰일 났다”며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하면, 앞면 못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 582㎡, 일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 515㎡, 일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8천 만원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